

“비리 잡으려다 교육자치 잡겠네”

예비후보들, 첫 직선 교육감 권한 축소 MB정책 강력 반발

청와대가 비리척결을 위해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교육자치권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6·2 교육감 및 교육 위원 선거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적 당선자와의 정책대립 가능성 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9일 “정부

의 교육비리 척결의지는 환영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를 전국 교원의 비리로 몰아가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히 광주의 경우 인사권과 재정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 등 각종 교육성과를 내고 있는 데, 자율권을 대폭 축소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선진교육 정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감을 첫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 자치의 원년인 만큼 자율권을 오히려 확대하고, 부폐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예비후보는 “자율권을 최대한 주고 소신껏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희국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처럼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

들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이들의 당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지역 교원들은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통해 서울대 합격률 상승 등 각종 교육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전남처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교육감의 소신있는 교육정책이 중요한 만큼 자율권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남 예비후보도 “무조껀적인 권한 축소는 중앙정부의 통제권만 강화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기선 예비후보는 “그동안 교과부나 각 교육청에서 내놓은 비리·부패 방지 정책만 제대로 실천해도 깨끗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수장(교육감) 스스로가 청렴도를 높이는 의지를 갖는 게 교육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토착·교육·권력비리 발본색원”

이대통령 선언

이명박(MB)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토착·교육·권력 등 3대 비리 척결을 선언했다.

(관련 기사 3면)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권 3년차에 토착·교육·권력 3대 비리 척결을

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한두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없다”며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

꿔야 한다.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끌나서는 안 되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를 임해달라”고 강조한 뒤 “공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제로’

이전기관 임직원 사택 마련 비상

오는 2012년 말 완공예정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21필지 123만7천32㎡로, 전체 혁신도시 면적 731만5천㎡의 2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삼업용지(28만㎡) 등도 매각이 안 돼, 혁신도시 조성에 전반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한국전력 등 15개 공공 기관이 이전해 오더라도 공동주택 등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못할 경우 공동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혜의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상당 기간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 KDN, 한전 KPS, 농촌경제연구소 등 5개 기관에 사택 단지 조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1천500세대의 사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전기관 임직원·노조 관계자를 초청해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성과 사택 건립’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이전기관과 사택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도 체결할 방침이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완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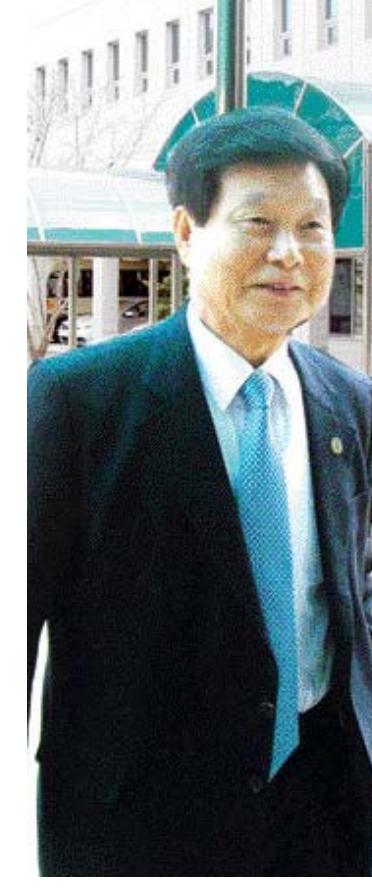
꽃샘추위 속 매화 활짝

전국에 꽃샘추위가 불어닥친 9일, 광양시 다방면 매화마을 일대가 매화향으로 가득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이 곳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매화문화 축제’가 열린다.

/광양=위지령기자 jwvi@kwangju.co.kr

한화갑 前 대표 전격 소환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천현금’ 집중 추궁



‘전남도의원 공천현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격 소환했다.

(관련 기사 3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지검장 조주태)은 이날 한 전 대표를 불러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현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순천지청에 도착, 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20여명의 취재진을 따돌린 뒤 후문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한 전 대표는 청사 후문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가 소감을 물어 “나중에 분명히 입장장을 밝힐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 전 대표는 30여분 간 차장검사와 인사를 나눈 뒤 11시께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06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뒤 중앙당에 3억원씩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양모 도의원과 박모 전 도의원에 대해 공천대가를 요구 했는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례적으로 공천 직후 3억원이라는 거액의 특별당비를 넷데 대해 공천을 대가로 한 ‘공천금’의 의혹이 짚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 소환에 앞서 이들 전·현직 도의원 2명은 물론,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과 당시 중앙당 조직위원장 Y씨 등 2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다.

또한 당시 전남도 공천심사를 담당했던 전 의원 J씨 등도 불러 조사하는 등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다각적인 수사를 해왔다.

순천지청 김회재 차장검사는 “한 전 대표 본인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 전 대표는 30여분 간 차장검사와 인사를 나눈 뒤 11시께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06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뒤 중앙당에 3억원씩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양모 도의원과 박모 전 도의원에 대해 공천대가를 요구 했는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순천=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